

# 첫 발부터 묶인 광주·전남 '상생' 시·도발전연구원 통합 서둘러라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의 첫 단추인 시·도 발전연구원 통합 작업이 지지부진 하면서 호남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협력사업이 주춤하고 있다. 개별 상생 과제가 지자체와 의회 간 협력루기 양상으로 치닫하면서 광주·전남·전북의 상생으로 호남 대도약을 꾀한다는 민선 6기 청사진도 빛이 바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시·도와 시·도의회의 개별 역할을 결집하는 대담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25일 나주에서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과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을 함께 만나 광주·전남 상생에 대한 협조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시·도의회 의장에게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 과제에 의해 지자체와 의회 간 갈등이 촉발되는 분위기를 경계하면서, 찬반이 아닌 내용의 보완 쪽으로 논의 구조를 수정하기 위한 자리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에 시·도가 제출한 조례를 상정하

## 상생과제 줄줄이 스톱

## 오늘 시도지사·의장 만남

## 지자체·의회 합의 시급

지 않고, 분리 수순을 밟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조사와 의원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 상생에는 동의하면서 발전연구원 통합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통합 후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도 부족하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또 시·도가 상생 과제 마련부터 추진 과정에서 의회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3일로 예정된 시·도의회 주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여부를 묻는 공청회' 전까지 발전연구원 통합에 따른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의회는 물론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 공청회가 시·도 상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선 6기가 과거와 다른 점은 바로 상생을 통해 미약해진

호남의 힘을 모으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연구원 통합이라는 하나의 과제를 놓고 차질이 빚어지면서 과제 전반에 대한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와 시·도의회 간 과열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호남 소외는 계속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개관을 코앞에 두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중이고, 제대로 된 시설도 갖추지 못한 채 호남고속철도는 개통될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공약사업의 집행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3~4%대에 불과해 자칫 '지역 쇠락'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경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광주대 교수)은 "연구원 통합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역 특수성이나 정책 목표가 달라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라며 "위축되고 있는 호남의 위상을 감안, 시·도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지자체와 의회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지역구 50여석 축소 현의원들 반발 지구당 부활 매년 수백억 비용 부담

##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개정 의견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총·대선 오픈프라이머리(원전 국민경선) 도입 등 메가톤급 정치 이슈들이 포함돼 있다.

중앙선관위의 의견이 현실화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한바탕 태풍이 불기보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석패율제 등 일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핵심 제안 내용=중앙선관위의 제안 내용의 핵심은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정당별 비례대표 배분을 통해 여야가 모두 특정 지역에서 교차 당선 가능성이 높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중앙선관위 김경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마련했다"며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선관위가 제안한 제도가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문제점과 결림돌=중앙선관위는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은 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감축에 대한 여야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 ■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과 현행제도 비교

	현행	개정의견
선거제도	국회의원정수 300명·지역구(246명) 및 전국단위 비례대표(54명) 1인2표제로 선출	국회의원정수 300명·지역구(200명 안팎), 6개 권역별 비례대표(100명 안팎) 1인2표제로 선출
정당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불가, 당내경선, 여론조사경선, 전략공천 등 당내경선 매수죄 적발시 자수와 무관하게 법규정 따라 처벌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입후보 허용 및 석패율제 도입
정치자금	후보자 사퇴 선거일 직전까지 가능	국민경선 실시
	후보자 사퇴시에도 선거보조금 반환 불필요	당내경선 매수죄 관련 자수자 특례 규정 마련
	후보자 사퇴시에도 선거보조금 반환 불필요	후보자 사퇴 금지기간 설정 (선거일 전 11일부터)
	후보자 사퇴시에도 선거보조금 반환 불필요	후보자 사퇴시 선거보조금 반환
	당원협의회 허용, 당비 모금 불가·당원관리 불가	구·시·군당 허용, 당비 모금 및 당원관리 가능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법인·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 허용
	2004년도 이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액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제한 (선거있는 해 3억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국회의원 후원금 모금한도액 2억원으로 현실화(선거있는 해 4억원)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단순 인구 비례를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의 의석수에 있어 타 권역에 비해 호남·제주권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총선과 단체장 선거 오픈프라이머리의 경우, 상대당의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지지후보로 선택하는 이른바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까지는 고안되지 않은 것이 미비점으로 지적된다.

여야가 경선 일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어느 한 쪽 정당이 자신의 패만 노출시키면서 국민경선을 실시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돈 먹는 하마'로 평가받았던 지구당이 공식 부활된다면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비 등 매년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 반응=여야는 중앙선관위의 제

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모든 의견들을 종합해 조만간 가동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숙의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선거제도의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근본취지와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며, 큰 틀에서 환영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우리당이 도입을 주장해 왔던 것으로 20대 총선에서 승자독식의 정치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윤장현 시장 "전일빌딩, 광주정신·문화 확산 창구 활용"

## 광주시 조만간 TF팀 꾸려

## 리모델링 방안 등 검토

윤장현 광주시장은 24일 "전일빌딩을 광주정신과 문화를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날 광주시 상무지구에서 문화당당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최근 전일빌딩 활용 방안을 놓고 간부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문화전당과 연계할 수 있고 국제교류와 청년 문화공

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 공간으로 꾸미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시장은 이어 "건물을 최대한 보존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조만간 TF팀을 꾸려 전일빌딩 리모델링 비용, 국비지원 방안, 각 공간별 활용 용도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다.

광주민중화운동을 묵묵히 지켜왔던 전일빌딩은 지난 2011년 광주도시공사 가 매입한 뒤 부분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까지 빛고를 문학관, 미디어 박물관 등 복합공간으로 꾸미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1가 1번지에 있는 전일빌딩(지하 1층, 지상 10층)은 애초 철거된 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역사적 상징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광주시가 지난 2013년 여론조사를 거쳐 부분 존치 방침을 정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정희 생가 찾은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과 의원들이 24일 경북도의회와 상생발전, 지방자치발전, 동서 화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뒤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 공동합의에 따라 전남·경북 양 도의회는 정기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입법경험을 공유하고, 의회와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